

文 “4대강 정책감사”... 적폐청산 신호탄

청와대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그간 보였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를 넘어서 지난 9년 간의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책감사 주체는 감사원이다.

총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돼 왔던 국책사업이다. 본래 4대 하천 정비계획으로 대운하와 함께 추진된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에서 분류뿐만 아니라 주요 지류까지 포함되면서 사업이 커졌고 생태계 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심각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

다”고 감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대형국책 사업의 정책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환경부의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되는 등 정부는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대통령의 차적 쌓기에 동원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셈이다.

또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그 중 두 차례(2011년 1월27일, 2013년 1월17일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3차 감사(2013년 7월 10일 발표)는 건설사 담합 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하고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지시는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 행보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이전 조치들과는 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박근혜’ 정책으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합창으로 바뀐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검토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보수정권의 정책을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시키는 데 그치는 반면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들을 직접 겨냥, 잘못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11일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일단 청와대는 “전 정부와의 색깔 대립 이라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김수현 사회수석)며 어디까지나 정책감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번 4대강 감사를 신호탄으로 적폐청산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틀어줄 것이라 전망이 많다.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적폐청산도 정권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와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의 4대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으로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꼽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4대강 사업과 함께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등으로 감사나 조사 확대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文정부 청사진 그린다’... 국정기획자문위 출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최장 70일 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자문위는 통상 이전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다만 인사권은 국정기획위에서 빠졌다. 오히려 정책부문에만 집중하게 됐다.

50일간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20일 연장을 통해 최장 70일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종료 시점에 맞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기획위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5명) ▲경제(5명) ▲경제(2명) ▲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6개 분과로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 이한주 가천대 교수(경제1분과), 이계호 민주당 의원(경제2분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말 및 위원 소개를 하고 있다.

위,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분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정치·행정분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외교·안보분과) 등이 포진해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갖고 김진표 위원장 주재의 첫 전체회의를 진

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운용방안 등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변인으로는 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대선에서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광은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50일 활동·20일 연장 가능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에 출연,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대책 등과 다른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취할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당, ‘촛불개혁 10대 과제’ 靑에 제안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혁과제의 선제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내 보고서가 22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 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유됐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 성공사례를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시대상, 적폐청산, 소득격차 해소, 공정사회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 열망을 모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 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하고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혁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연탄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20년 총선거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조도 제안했다.

우선 “초기 100일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성과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이라며 “특정의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협력을 얻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에 착수해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적폐청산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정적 정부 운영과 국민 지지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시연, 주요지역 도시재생 착수 등을 주장했다. 이후 지방선거 이후 사회경제적 개혁과제의 본격 추진을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국가 체제 기반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뉴시스

민주당 도당-군산시, 공약 이행·현안해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군산시는 22일 지역공약 이행과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항로 미실시 구간 준설 국가사업 전환, 새만금 대통령 직속 직제 설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국도 4호선 잔여구간(장지도-관리도) 개설 등이 건의됐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군산조선소는 전북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와 1조 4천억원의 현대중공업 투자비 및 지역 조선업 생태계 구축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린립기자재인증센터, 기업 R&D 및 인력양성 등 관계 생태계 기반 붕괴가 가장실화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우선 현대중공업 보유 수주잔량을 군산에도 배정할 것과 일자리 정부정책에 협조한 조선소에 선박편도 잔여분과 공공선박 발주 등 인센티브 지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에 주요 동력을 차지하는데 공감하고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WTF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Sponsors: Kwanju Bank, JB Woori Capital, ASIANA AIRLINES, etc.